

‘단속 CCTV’ 비웃는 쓰레기 무단투기 기승

광주 도심 음식물 등 쓰레기 점령 악취에 운전자·보행자 안전 위협 5개 구 CCTV 962대 제 역할 못해 ‘과태료 부과된다’ 안내 소용없어 “쓰레기 처리 장소 부족” 지적도

광주 도심 주택가를 중심으로 무분별한 쓰레기 무단 투기가 기승을 부리면서 인근 주민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광주 5개 지자체는 상습 투기지역에 단속 CCTV를 설치했지만,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어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지난 18일 찾은 광주 동구 지산동의 한 원룸촌. 빌라 건물이 빼곡히 들어찬 골목 한쪽에는 ‘무단투기 단속 CCTV 촬영 중’이라고 적힌 안내 문구가 적혀 있었지만 인근에는 각종 쓰레기가 가득 쌓여 있었다.

일반·재활용 쓰레기뿐만 아니라 훼손된 쓰레기봉투와 먹다 남은 커피, 음식물 쓰레기 등이 뒤엉켜 악취를 풍겼으며, 일부 쓰레기는 강한 바람에 차량이 지나다니는 큰 길가까지 날아가 운전자와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했다.

같은 날 찾은 광산구 월곡동 역시 사정은 마찬가지였다.

단속 CCTV 바로 앞에 종량제 봉투에



지난 18일 광주 동구 지산동 주택가 단속CCTV 앞에 불법투기된 쓰레기들이 길가에 나뒹굴고 있다. 원 안은 단속 CCTV.

담기지 않은 쓰레기들이 나뒹굴고 있었으며, ‘쓰레기 무단 투기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경고 안내 음성이 나오고 있음에도 아무렇지 않게 쓰레기를 버리는 시민들의 모습도 목격됐다.

인근 주민들은 쓰레기로 인한 악취와 미관 훼손 등으로 불편을 겪고 있다고 입

을 모았다. 대학생 최낙현(24)씨는 “자취방 주변에 단속 CCTV가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길가에 쓰레기가 가득해 반대편 인도로 돌아가는 등 불편한 부분이 너무 많다”며 “무단 투기 시 과태료 부과를 알리는 음성 경고와 감시 CCTV가 있지만 제대로

된 처벌이 이뤄지는지 의문이다”고 미간을 찌푸렸다.

주민 장모(26)씨 역시 “겨울철에는 그나마 덜하지만 날이 더워지면 악취가 심해질 것이 걱정된다”며 “지금보다 더 강력한 단속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광주 5개 자치구는 쓰레기 불법투기를

막기 위해 단속 CCTV 962대를 설치했지만, 단속 효과는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지역 내 불법투기 단속 CCTV는 △동구 127대 △서구 117대 △남구 357대 △북구 279대 △광산구 82대가 각각 설치돼 있다.

900여 대가 넘는 불법투기 단속 CCTV를 통한 과태료 부과 건수는 매우 적다. 지난해 광주 지역 과태료 부과 건수는 △동구 28건 △서구 0건 △남구 0건 △북구 6건 △광산구 8건에 불과했다.

광주 한 자치구 관계자는 “CCTV를 통해 쓰레기 무단 투기 단속과 예방 효과를 기대했으나, 시민들의 인식이 아쉽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무단 투기가 계속되는 원인 중 하나로 적절한 쓰레기 처리 장소가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설선미 호남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는 “빌라·원룸촌은 쓰레기 처리시설 자체가 부족해 주민들이 쓰레기를 버리는 데 어려움을 느낄 가능성이 크다”며 “단속뿐만 아니라 처리시설 확충도 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쓰레기 무단투기 행위가 적발되면 폐기물관리법 제68조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다.

글·사진=이정준 수습기자

광주 남구 공사현장 인근 기울어진 건축물 ‘해체’ 명령

광주 남구 도시철도 공사현장 인근 노후 건물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결과 사용제한 및 해체 등 행정조치 명령이 내려졌다.

19일 남구에 따르면 기울어진 민원이 접수된 방림동의 한 노후건물을 대상으로 한 정밀안전진단이 마무리돼 지난 17일 건물 소유주에 대해 사용제한·보수·보강 및 해체 등의 행정조치 명령이 통보됐다.

해당 건물은 지난 1987년 사용승인을 받은 노후상가주택으로 연면적 148.5㎡, 3층 규모로 조성돼 현재 점포와 사무실, 주택 등이 입주해 있다.

남구는 지난해 12월13일 상가 건물이 인도변으로 기울었다는 주민의 민원을 접수했고, 구 건축안전센터가 나서 현장 확인을 마친 뒤 건물 소유주 등에 대한 긴급 주거지원을 완료했다.

이후 도시철도본부가 진행한 정밀안전진단 중간점검 결과 철거가 필요한 건물에 내려지는 E등급을 진단 받았고, 최근 용역 결과가 발표되며 행정조치 명령이 내려졌다.

이에 따라 건물 소유주는 보수·보강조치를 통보 받은 날부터 2년 이내로 조치에

착수해야 하며, 착수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조치를 완료해야 한다.

남구는 현재 건축물 붕괴사고에 대비해 주변차량을 통제하고 우회로를 만들어 놓은 상태다.

남구 관계자는 “남구 건축안전센터 내 전문인력을 동원해 정기적인 현장 점검에 나서는 등 시민 안전을 위협하지 않도록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건물 소유주는 지난 2022년 주변 도시철도 발파공사로 인한 지반 침하를 주장하고 있다. **윤준명 기자**



19일 오전 10시1분께 60대 여성 A씨가 몰던 SUV가 광주 광산구 신가동 한 병원 상가 1층 카페에 돌진했다. **광산소방서 제공**

특전사동지회 “12·3 비상계엄 규탄, 조사 성실히 임해야”

광주 국립 5·18민주묘지 찾아 참배

특전사 예비역들이 국립 5·18민주묘지를 찾아 참배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을 규탄했다.

(사)특전사동지회에 따르면 임성록 고문과 이재규 사무총장을 비롯한 회원 16명은 19일 오후 광주 북구 국립 5·18민주묘지를 찾아 헌화와 분향을 하며 오일영령을 참배했다.

이후 1980년 5월 당시 전남대 총학생회장이었던 박관현 열사와 시민군 대변인으로 알려진 윤상원 열사 묘역 등을 둘러봤다.

이날 임 고문은 “군 통수권자의 우매하고 어리석은 내란 행위로 국군의 사기가 떨어지고 외부 침략이 아닌 내부 분열로 우리나라는 최대 안보 위기에 놓였다”며 “국론 갈라치기로 대한민국 정부와 헌법기관, 사법부가 국민으로부터 불신받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부 정치군인들이 출세와 권력을 위해 또다시 특전사 병력을 이용했다”면서 “지난 1980년 이후 특전사들은 현재



(사)특전사동지회 회원들과 황일봉 전 공법단체 5·18민주화운동 부상자회장이 19일 오후 광주 북구 국립 5·18민주묘지를 찾아 고(故) 최미애 열사의 묘소 앞에서 묵념하고 있다.

까지 국민들에게 신뢰를 회복하고자 노력했으나 이번 12·3 비상계엄에 동원돼 참담한 심정이다”고 호소했다.

또 “계엄 당시 동원된 각급부대 지휘관들이 부하들과 국민에게 용서를 구하는 길은 오로지 진실을 밝히는데 앞장 서는 것”이라며 “군 통수권자의 명령에 의해 어쩔 수 없이 비상계엄에 참여하게 된 특전사들은 (국민들에게)참회하는 마음으

로 수사기관 조사에 성실히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980년 5월 광주 진압명령에 투입됐던 이 모(68)씨도 참배 현장을 찾아 “5·18진상규명조사위원회 활동 당시 겪었던 일들을 조사위에 고백했다. 사죄하는 길은 진실 고백 뿐이다”며 “12·3 비상계엄에 투입된 특전사들도 양심고백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글·사진=민현기 기자**

후진 주차하던 60대 운전자 카페 돌진... 2명 부상

후진하던 SUV가 카페로 돌진해 2명이 부상을 입었다.

19일 광산소방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1분께 60대 여성 A씨가 몰던 SUV가 광주 광산구 신가동 한 병원 상가 1층 카페에 돌진했다.

이 사고로 A씨와 카페 내부에 있던 손

님 1명이 경상을 입었다.

사고 당시 A씨는 음주 상태나 무면허 운전은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가 주차를 위해 후진하던 중 운전 미숙으로 가속 페달을 밟은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정상아 기자

보성서 10대 불량난으로 축사 화재

보성에서 10대 학생들의 불량난으로 인한 축사 화재가 발생했다.

19일 보성소방 등에 따르면 18일 지난 오후 4시37분께 보성군 벌교읍 마동리의 한 축사에서 불이 났다.

소방당국은 인력 35명과 장비 8대를 동원해 1시간33분만인 오후 6시10분께 불을 완전히 꺾었다.

이 불로 가축 등의 피해는 없었지만 축

사와 창고 3동이 전소되고 지게차 등이 불에 타 소방서 추산 4139만200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났다.

경찰은 C(13)군과 D(10)군이 축사 인근에서 라이터로 종이컵에 불을 붙이며 불량난을 하던 중 불티가 축사로 옮겨 붙은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경위와 고의성 여부 등을 조사 중이다.

정유철 기자